

문 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 검토”

민주 지도부 초청 간담회서
靑 “소비진작 목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오사오사’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린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이 화답한 모양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청 간 최대한 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되어서 그동안 일률

적으로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당·정·청이 노력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문 대통령 - 민주 지도부 새해 첫 간담회 현장 속으로

“역대 최고 성과낸 당정청 자부”... 원팀 강조

문 대통령, ‘대권 출마’ 이낙연 내달 9일 이전 사퇴 염두 발언
‘신복지체제·상생연대 3법’ 언급, 이 대표에 힘 심기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9일 새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 ‘호흡’을 강조하며 집권 후반기 ‘원팀’ 기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동민·박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약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부수석, 배재정 정부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1시간 46분동안 진행됐다.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늘어난 시간에서 보듯 굉장히 진지한 간담회였다”며 “폭넓은 국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장에는 문 대통령과 김경숙 여사가 직접 농사를 지어 재배한 곡물로 만든 곡물차가 준비됐다.

공개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초청 간담회를) 미뤘었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의 지급 규모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빚어진 상황을 중재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은 수는 없었지만 사각지대가 포함될 최종에서 웃음이 나왔다.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대표는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내달 9일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당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 위기 등 국정 현안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당의 최고 지도부를 같이 모시게 됐다”며 “그동안 이낙연 대표님이 중심이 되어서 당을 아주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지원금 지급과 한국판 뉴딜 추진, 압박 활동 등을 들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상의 호흡”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 체제’와 ‘상생연대 3법’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아동수당 확대 등 구상이 담긴 신복지체제와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은 이 대표가 대선 승부수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꼽힌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의 지급 규모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빚어진 상황을 중재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은 수는 없었지만 사각지대가 포함될 최종에서 웃음이 나왔다.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대표는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내달 9일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당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 위기 등 국정 현안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당의 최고 지도부를 같이 모시게 됐다”며 “그동안 이낙연 대표님이 중심이 되어서 당을 아주 잘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지원금 지급과 한국판 뉴딜 추진, 압박 활동 등을 들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상의 호흡”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 체제’와 ‘상생연대 3법’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아동수당 확대 등 구상이 담긴 신복지체제와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은 이 대표가 대선 승부수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꼽힌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일제점검·정비 추진

전북도는 올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의 원년으로 삼고, 주요 시설물의 현황 재조사, 관리시스템 등록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작년 집중호우 당시 하천 합류부의 수위상승에 따른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를 교훈 삼아,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 재발을 막고자 추진한다.

도내 일제점검 대상 주요 농업생산 기반시설로는 ▲농업용 저수지 2,185개소(시·군관리 1,770, 공사관리 415), ▲양·배수장 926개소(시·군관리 236, 공사관리 690), ▲취입보 1,419개소(시·군관리 797, 공사관리 622), ▲농업용 관정 2,489개소(시·군관리 2,437, 공사관리 118) 등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스마트 영농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농업기반 시설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예측가능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농도 전복이 앞장 서 영농인들에게 맞춤형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양로시설 3곳

복지부 시범사업 선정

전북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활용 비대면 디지털 돌봄시범사업에 도내 3개 시설이 선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양로시설 94개소 중 1차년도 대상시설로 전국의 15개소를 선정했다.

전북은 전주 1개소, 익산 2개소 등 총 3개소가 선정되며, 경기 7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대상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비대면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화로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비대면 돌봄시스템 구축사업이다.

김현옥 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로 고립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 산재사고 사망자 221명”

민주 윤준병 의원 “고질적 행태 개선 위한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2016년~2020년 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21명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이 추락(떨어짐)·총돌(부딪힘)·협착(끼임) 등 소위 ‘후진국형 산재사고’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30대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21명이었고, (추락)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락)·(총돌) 21명, (협착) 17명, (SK건설)·(GS건설) 14명, (대림산업) 12명 순이었다.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유형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추락(떨어짐)을 비롯해 총돌(부딪힘),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으로 전체의 68.3%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92명으로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딪힘’·‘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22명(10.0%), ‘물체에 맞음’ 20명(9.0%) 순이었다.

한편,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재해자(산재사고 사망자 포함) 수는 5년간 총 7,911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GS건설(추) 1,452명, (추) 대우건설 859명, 현대건설(추) 516명 순이었으며,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1,979명, ‘넘어짐’ 1,707명, ‘물체에 맞음’ 9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락·협착·전도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이 10명 중 7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형건설사에 비해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후진국형 재해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산재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 제안

민주 김수홍 의원, ‘선풍’ 찾아 투자유치 호라도 나서

국회 기획재정위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지난 19일 선풍식품(주)(대표 박진선)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며, 기업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김수홍 의원은 올해 초 두산그룹의 방음회 회장을 만나 핵심기업의 투자 의향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아산시의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바 있다.

이어, 경남 창원시의 두산중공업과 태림산업 등을 방문,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과 함께 선풍식품을 방문한 김 의원은 박진선 대표를 만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선풍식품(주)는 국내 대표 식품기업

으로서 간장, 된장, 조미료, 육포 등을 생산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발효기술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바이오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익산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글로벌식품존에 약 3만2,000평 규모에 1,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위해 협상 중인 상황이다.

투자가 성사되면 100여 명의 신규 고용효과는 물론, 관련 식품기업의 추가 이전과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수홍 의원은 “선풍식품은 인본주의 경영으로 잘 알려진 훌륭한 기업이며, 전식품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성과도 보유하고 있는 탄실한 기업”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게 되면 국가적인 식품산업 발전과 아울러 지역 고용과 농산물 생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영세자영업자 “영업 손실 직접 보상해야”

박선전 전주시의원, 법률 제정 촉구... “보상 프로그램 만들어야”

코로나 사태로 생계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 지급 기준마저 차차 단축해다 서로 달라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불만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지원금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예산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 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 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건물 임대료 인하 역시 지급처럼 세금감면 정도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손실보상제도를 도입, 건물 임대료 인하 금액 수준의 현금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될 때까지 연대”

최영심 도의원, 지지 뜻 밝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이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촉구 천막농성장을 찾아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지난 19일 전북도청 앞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촉구 천막농성장을 찾은 최영심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청행동에 밝힌 새만금호 해수유통



그는 또한 “지난 20년 동안 담수화를

의 당위성에 적극 공감하며 전북도는 물론이고 새만금위원회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해수유통이 결정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